

“법관 양심 저버린 치욕의 판결” 비난 봇물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후폭풍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각하 판결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판결을 한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판결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의 논평과 비판 기자회견도 줄을 잇고 있다.

정치권과 노동계도 가세하면서 판결로 인한 논쟁은 격화되는 모양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낸 개인청구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재판부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해당 청원 글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7만8000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한 달 내

3년전 대법 판결과 완전 배치 안보 불안 등 ‘사법 외적’ 판단도 “비상식적·비법리적 결정” 성토 판사 탄핵 촉구 국민청원 제기 지역 시민단체, 규탄 회견도

20만명이 동의한 국민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나 관련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도 공동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현실에 굴복한 재판부의 비상식적, 비법리적 판단”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공동 논평에는 민변,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15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우선,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선례를 들면서 “현재 사정 변경이 없다면 해당 전원합의체 의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타당한데, 별다른 사정변경이나 추가 논리 없이 다른 해석으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민변 등은 “일본의 보복과 이로 인한 나라 걱정에 법관으로서의 독립과 양심을 저버린 판단을 했다”면서 “민사소송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금지조문의 법리를 실시하면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부끄러움없이 명시했다”고 비판했다.

이국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도 “인권,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적 문제까지 고려한 판결”이라며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앞에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노동계와 정치권도 가세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 역할을 뛰어넘어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한 판결이며, 사법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치욕의 판결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신 추락이나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부의 판결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천일 사고의 잔재”라고 비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하직원 집 지붕 색깔 바뀐” 군수 지시는 인권침해 해당 인권위, 후속 조치 권고

부하 직원이 사는 집 지붕 색깔을 바꾸라고 한 자치단체장의 지시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계약직 직원의 주택 색상에 관여한 유두석 장성군수의 지시가 업무적 범위를 벗어난 ‘행동 자유권 침해’로 판단하고 유 군수에게 원상회복 또는 피해보상 등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성군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장성읍에 갈색 스페인식 기와를 얹은 유행형 주택을 지었다. 준공 직후 지붕과 처마를 노랗게 칠하라는 요구가 시아버지, 동료 공무원 등을 통해서 전달됐다는 게 인권위가 파악한 내용이다.

당시 장성군은 지역 명소인 황룡강의 이름에서 착안, ‘엘로우시티’를 내걸고 노란색을 강조한 색채마케팅을 경관·정책 등에 활용해왔다. 건축물 외벽, 공공 조형물, 산업 시설물 등에 노란색을 입히고 노란색 정원을 조성하는 등 곳곳에 노란색으로 바꾸면서 ‘엘로우시티’를 알렸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유 군수의 지속적인 요구에 주택 지붕과 처마, 담장, 대문을 노란색으로 바꿨지만 정신적인 고통으로 계약 기간을 남겨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점을 감안, A씨가 장성군 계약직 직원이자 며느리로서 이중의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계약직이라는 고용 불안정성, 위계질서가 뚜렷한 공무원 사회에서 하위직이라는 신분상 한계로 군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디자인 업무를 담당했던 A씨가 엘로우시티 경관 조성사업에 솔선수범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는 유 군수 측 해명도 자발적 동참을 격려하는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군 성범죄·아동학대 처벌 강화 대법원, 양형기준 손 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군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제 110차 전체회의를 열고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의 미비점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군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의 양형기준은 지난해 5월 처음 마련됐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군인 등 강제추행’은 최고 징역 4년, ‘군인 등 강간’은 최고 징역 9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상관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 등을 형량을 높이는 특별가중인자로 정하는 등 군내 범죄의 특수성도 양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도 양형기준을 수정할 계획이다.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동학대실해최가 신설돼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됐다.

/연합뉴스

공직자 부통산 투기 의혹 관련 광주지검, 광산구청 압수수색

검찰이 공직자의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통산 투기 의혹과 관련, 광산구청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이날 광산구청 개발 정보 취득 부서 등에서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전직 광산구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공직자 투기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보강 수사의 필요성을 들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전직 광산구청 간부 공무원 A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한 상태다.

A씨는 지난 2017~2018년 사이 광주시 광산구 소촌산단 외곽도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이 일대에 5억 8000만 원 상당의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부 토지가 수용되면서 3900만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서구청 퇴직 공무원을 통해 아파트 건축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자신과 건설업자 B씨 소유 70억원 상당의 토지를 90억원에 되판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차별을 깨뜨리자” 광주 시민단체가 8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2021년 광주 차별철폐대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연 뒤, 차별 내용이 새겨진 열음판을 바닥에 내려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리 수술 의혹’ 병원 압수수색

광주경찰, 의사·간호조무사 6명 입건...병원측 “허위 주장 법적 대응”

광주지역 척추전문병원의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광주시 서구 A 척추전문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

행, 수술 참여 의료진·일정 등이 담긴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앞서 해당 병원에서 지난 2018년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대신해 수술했다는 제보 등에 따라 구체적 혐의를 파악, 의사 3명, 간호

조무사 3명 등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제보 내용 외에 제기된 추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일 신청한 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곧바로 병원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대리 수술이 특정 시기에만 일부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는지,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이 모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 2018년께 간호조무사들이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수술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제보 자료·영상 및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거쳐 제기된 의혹을 규명할 것”고 말했다.

한편, 대리 수술 의혹이 불거진 병원측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